

광주 '스쿨 미투' 교사 무더기 추가 징계

시교육청 성범죄 연루 M고 교사 16명 징계 요구 중징계 11명·경징계 3명 등...3월 2곳 이어 추가 법인 측 수용 여부·교사들 소청 심사 등 관심사

지난해 광주교육계를 뒤흔든 '스쿨 미투' (#Me Too·나도 피해자) 연루 교사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 처분이 또 다시 내려졌다.

지난 3월 2개 사립고에 이은 추가 조치로, 학교법인인 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역면 그대로 받아들일지 관심이 다.

21일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스쿨 미투 사건에 대한 징계 심의 결과를 토대로 학교법인 D학원 산하 M고 교사 16명에 대해 인사상

처분을 요구했다. 중징계 11명, 경징계 2명 등이다.

교육청은 학생들에 대한 성추행·성희롱·부적절 언행의 경중에 따라 징도가 심한 7명에 대해 해임, 4명은 정직 처분을 법인 측에 요구했다. 또 1명은 감봉 3개월, 또 다른 1명에 대해서는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경고 처분토록 했다.

이미 퇴직한 기간제 교사 4명에 대해서는 불문에 부쳐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해당 교사들은 수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으나, 시 교육청은 성범죄자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무더기 징계를 요구했다.

2017년 7월 개정된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대한 규칙'에 따르면 '미성년자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의 경우 대부분 파면 조치토록 돼 있고,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도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도록 돼 있다. 교육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기본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학교에서는 지난해 9월 일부 학생들이 SNS에 '스쿨 미투'를 호소하면서 자체조사를 거쳐 학교장과 해당 교사들이 공개 사과했다. 교사가 수업 중 위안부 사진을 보고 '너희들도 이때 태어났으면 위안부였어'라고 말하

는가 하면, '성매매는 어차피 여자들이 원해서 하는 거 아니냐'고 발언해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사학법인이 교육청 요구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사학의 자율성을 이유로 징계 수위를 조절하더라도 교육청이 강제로 이를 통제할 근거가 없는 데다 중징계를 받은 교사들의 경우 이에 불복해 교육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하거나 추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한편 시교육청은 앞서 지난 3월 스쿨 미투에 대한 1차 징계심의 결과를 토대로 2개 사학법인 산하 D여고와 J고 소속 연루 교사 36명에 대한 인사상 처분을 요구했다. 총 38명 가운데 18명은 중징계, 4명은 경징계 처분할 것으로 요구했다.

조인호 기자

전국서 265건 지진감지 신고 "인·물적 피해 아직 없어"

21일 경북 상주시 북북서쪽 11km 지역에서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한 뒤 265건의 지진 감지 신고가 들어왔다.

행정안전부(행안부)와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4분께 지진 발생 후 전국적으로 잠정 집계된 지진 감지 신고는 총 265건이다.

충북이 100건으로 가장 많고 대전 47건, 세종 30건, 경북 27건, 충남 22건, 경기 21건, 서울 7건, 인천 4건, 광주 3건, 대구·전북 각 2건으로 집계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지진 피해는 없다. 이번 지진은 경북 상주시 북북서쪽 11km 지역에서 발생해 가장 가까운 경북과 충북 지역에는 최대진도 4(IV)가

감지됐다. 이는 실내에서 많은 사람이 느끼고 밤에는 잠에서 깨기도 하며 그릇과 창문 등이 흔들리는 수준이다.

올해 최대 진도 4의 지진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내용은 세 두 번째다.

소방청 관계자는 "모두 지진을 느꼈다는 유감 신고"라며 "현재까지 인명과 시설물 피해 신고는 없다"고 말했다.

재난안전 총괄부처인 행안부는 지진 발생 직후 김계조 재난안전관리본부장(차관) 주재로 긴급영성회의를 갖고 지진 발생 상황을 살펴봤다. 지역별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여진과 추가 피해 발생에 대비해 상황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전 화순지사, 수 개월 폐 전신주무단 야적 물의

한전 화순지사가 수 개월간 폐 전신주를 무단으로 야적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한전 화순지사는 신재생 화선 신설 공사를 도급액 약 28억여 원을 들여 공사는 J 업체, 감리는 주식회사 C 감리단이 맡아 2018년 4월 26일 착공해 공사하는 과정에서 폐쇄된 도로에 폐 전신주를 무단으로 수 개월간 야적해 왔다.

이곳은 지난해 6월경에도 폐 전신주를 무단으로 야적해 민원이 발생한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한전 화순지사 관계자 중 누구도 이곳에 폐 전신주가 있는지 알지 못했다.

또 다른 배전공사인 2019~2020년도 단가계약공사를 맡은 주) A 실업은 화순전 임시주차장에 몇 달씩, 마치 신고된 야적장처럼 무단으로 하천 부지를 사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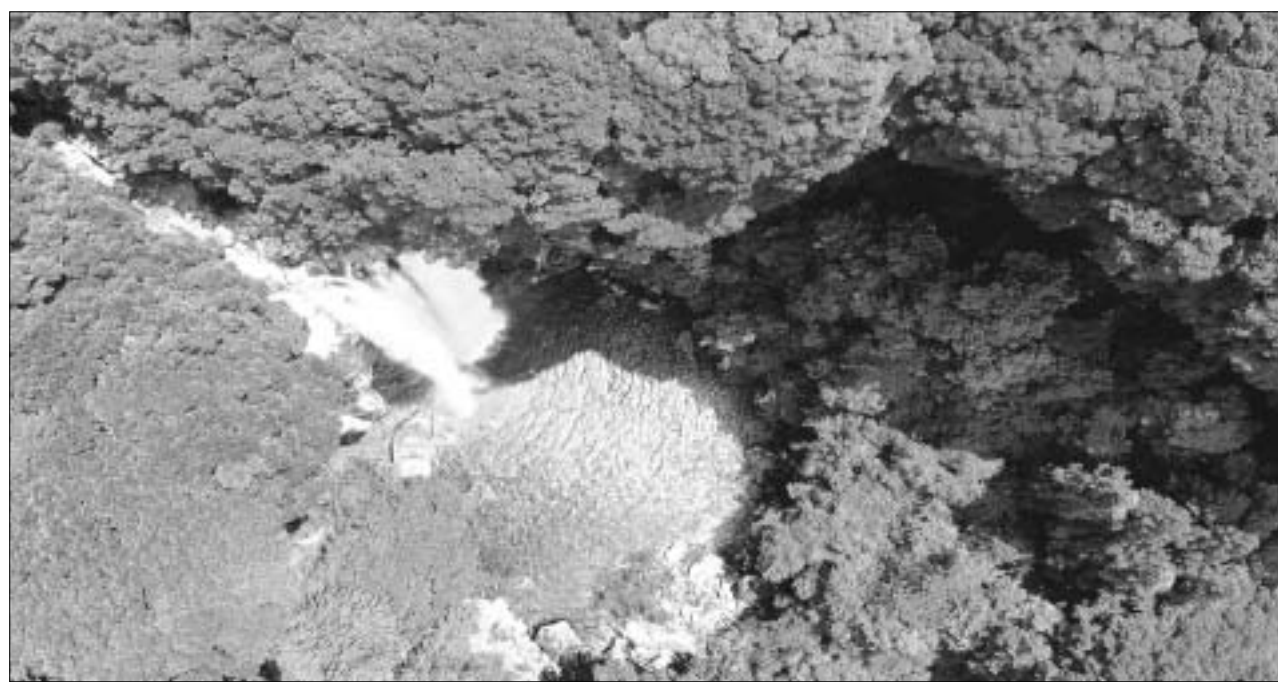
이곳은 아예 '야적장' 표지판도 설치해놓고 담당자 전화번호도 있었지만, 확인해본 결과 실제 담당자 전화번호도 아니었다. 이 장소 또한 한전 화순지사 관계자는 모르고 있었다.

한전 화순지사 김모 감독관은 "보고를 안해서 잘 몰랐으며 원래는 폐기물 집하장이 있는데 집하장으로 놓아야 하는게 정석이다" 말했다.

또 화순군 관계자는 "하천부지는 사용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말하고, "바로 치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취재가 시작되자 폐쇄된 도로에 무단으로 야적된 폐 전신주는 공사 업체에서 모두 치웠다.

최순=박승철 기자



폭우가 선물한비경 태풍이 지나고 맑은 날씨를 되찾은 21일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영포폭포에 시원한 물줄기가 떨어져 주변 기암절벽과 조화로운 매력을 느끼게 한다.

경찰, 광주 사립고 3학년 시험지 유출 의혹 수사 착수

경찰이 광주 모 사립고등학교의 기말고사 시험문제 사전 유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1일 지역 모 사립고교 교사가 특정 수확동아리반 학생들에게 기말고사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제공해 학사 행정을 방해했다는 고발 내용을 토대로 수사 중이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검찰 지휘에 따라 모 고교 수학교사를 업무방해·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광주시교육청 장학관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교사가 문제 유출로 학사행정을 방해했는지, 교원으로서 책임을 지냈는지, 학교 차원에서 상위

권 특정 학생들의 내신 성적을 관리해 왔는지 등을 다각도로 수사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조사 결과 이 학교는 지난 5월 중하순(공휴일) 2차례에 걸쳐 기숙사생 주숙 심화반 소속 수확동아리 학생 31명에게만 고난이도 문제와 답안지가 담긴 유인물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5개 문제(총점수 26점)가 이달 5일 치러진 기말고사 수험시험에 변형 없이 출제됐고, 상위권 특정 학생들의 내신 성적 관리를 위해 시험문제를 사전 유출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시교육청은 특별감사반을 꾸려 지난 8일부터 해당 고교의 3년간 시험·

답안지(수학 외 다른 과목 포함)와 상위권 학생들에게 제공된 교재 목록을 분석하고 있다.

또 상위권 학생들에게 학습 편의를 제공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발인 조사를 마친 수사 초기 단계"라며 "시험문제 사전 유출 경위를 비롯해 각종 불공정 사례가 있었는지 살피는 등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감사가 끝나면, 교육청 협의 뒤 감사 결과도 수사에 참고하겠다. 향후 동아리반 학생들과 여러 교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런판결 저런판결

고속도로 교통사고 대피 중 부상 대법원 "첫 사고 운전자도 책임"

"1차사고 안전조치 미이행...인과관계 인정"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화재를 피해 차에서 내려 차신을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부상을 입게 했다면, 선행사고 발생자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보험회사 등 3곳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06년 10월 서해대교를 주행하던 중 앞서가던 차들의 연쇄 추돌사고로 화재가 발생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차에서 내려 차신을 건너다 뒤따라오던 트럭에 치어 부상을 당했다.

트럭과 공제 계약을 맺은 연합회는 A씨에게 손해배상금 1억8600여만원을 지급했고, 이후 연합회는 1차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자동차들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부담하라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선행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들도 A씨 부상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 손해배상금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속도로에서 고장 등으로 운전을 할 수 없게 되면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치 미이행으로 뒤따라오던 자동차와 추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선행차량 운전자 과실은 후행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분담범위를 정할 때 참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행사고를 처음 유발한 차량 운전자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안개가 짙게 낀 서해 안고속도로를 운전하는 뒤 차들이 주변 차나 사람을 추돌할 수 있었다"며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비록 A씨가 차에서 내려 대피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하더라도 선행사고로 인한 연쇄 추돌과 화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원심 판단에 상당인과관계와 공동불법행위 성립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앞서 1·2심은 A씨 부상은 앞선 사고와는 별개의 사건이라며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 원고 패소 판결했다.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이는요... 자폐치료중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옵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검진기관이 한정되어 있으나, 이외에도 검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콜센터 129] [고객센터 1577-1000]